

공약 4 복지 서비스 확대와 녹색 일자리로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.

□ 개요

- 더 많은 복지, 더 좋은 일자리: 산후조리, 보육서비스, 장기요양, 간병 서비스 등 지역 내 사회복지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
- 더 짙은 녹색, 더 좋은 일자리: 저탄소 건물 인증제, 에너지순환 마을버스 등 지역 맞춤형 녹색 일자리를 통해 실업 문제 해소

□ 현황

- 기존의 **토건 중심 한국경제**는 복지, 환경을 외면한 발전 모델로, 복지 후진국가, 에너지 다소비 국가, 지구온난화 주범국가라는 불명예를 가져 왔으며, 지속적 경제 성장 동력 상실, **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**
-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및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등은 전형적인 **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토건경제**
- 한국의 녹색일자리는 2008년 기준 61만 개에 불과(한국고용정보원)함.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서비스 비중은 13.8%로 OECD 평균 21.3%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임. 보건 및 사회복지 고용 비중은 32%로 OECD 평균 92%의 3분의 1 수준으로, 이를 **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면, 140만6천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**. 이 중 절반 이상의 일자리는 공공부문 복지서비스 확대로 이뤄져야 함.

□ 복지 서비스 일자리 확충 방안

- 출산가정의 70%에게 공공산후조리서비스 제공
- 보육시설 이용아동 40%까지 국공립보육시설 확대
- 실업자 및 재직자 고용서비스 확대
- 장애인 10만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최우선 확대
- 노인 12%까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
- 전국민 간병서비스 확대
- 연봉 2,000만원 일자리로 괜찮은 일자리 제공

[복지 일자리 확대안]

생애주기	제공대상	제공 서비스	일자리 창출	예산
신생아·산모	출산가정 70%	산후조리서비스	1만2천명	5천억원
영유아	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	공공베이비시터 서비스	2만명	7백억원
영유아	보육시설 이용아동 40% 까지 확대	국공립보육서비스	6만9천명	1조7천억원
영유아~아동	필요아동	시간연장, 방과후보육	7천명	1천억원
청년·장년층	실업자·재직자	고용지원서비스	7천명	1조 6천억원
노인	노인 인구 12%	장기요양서비스	22만명	2조2천억원
장애인	장애인 10만명	활동보조서비스	13만명	2조7천억원
전국민	전국민	간병서비스	19만명	2조
합계			65만5천명	11조5천억원

[녹색 일자리 확대안]

분야	사업 내용	일자리 창출	예산
건축에너지 효율화사업	- 일자리 창출 규모: 53,400명 = 3조원 지원 (230만 가구×130만원) × 1.78명(건축보수업 1억당 취업계수) - 공공기관/학교/상가건물 친환경 인증 의무화 등에 따른 시장 수요 확대에 따른 일자리 추가 창출 기대	53,400명+α	203만 가구 4년간 3조원 연간 7,500억
에너지순환 마을버스	- 폐식용유 재활용 바이오디젤 생산 ※ 폐식용유 수거: 공공급식, 패스트푸드, 치킨집 등 - 마을버스(대중교통 요금 인하)/공용차량 이용 - 바이오디젤 생산·수거 인력 지역 고용	2500명	사회적일자리 활용
합계		55900명 + α	3조원